

1998년4월24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 2.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 4.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 5.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
- 6.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 o 의원선서 및 인사 ..... 1
- o 5분자유발언 ..... 2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5
- 2.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0
- 3.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0
- 4.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단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1
- 5.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 ..... 11
- 6.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11
- o 국회운영위원장(하순봉) 인사 ..... 12

(18시4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0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강종희 의원과 4월 16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조익현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기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희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4월 24일

국회의원 강종희

국회의원 조익현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먼저 강종희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종희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받은 자유민주연합 소속 강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조익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8시55분)

○의장 김수한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천 의원 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께서 나와 주셨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은 반드시 상암지구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월에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여부를 신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확정한 이후에 혼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서도 주경기장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암동 경기장 건립을 백지화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고 또 잠실로 할지 아니면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문학경기장이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한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이렇게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 아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지구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상암지구가 가장 성공적으로 월드컵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잠실경기장 개·보수 활용방안은 국제축구연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아주 높고 또 인천 문학경기장 증축 사용방안은 주변시설이 상당부분 미비돼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스스로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실과 인천경기장으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암 지구는 그 접근성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43만 평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암지구의 주경기장 건설은 최초 FIFA에 통보된 안으로서 이것을 지켜 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가 이미지와 국제신인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상암동 경기장 건립은 국가경제난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총 건설비 4520억 원이 소요되는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 측의 단견입니다.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3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25만 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이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이 백지화될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적자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암동은 15년 동안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서울의 버림받은 정말 불행한 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서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십수 년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부 측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민여론은 상암동 경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축구장 신축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요망하는 온 국민의 희망이자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서리를 포함한 몇몇 최고정책결정자의 막연한 계산만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국민적 염원이 담긴 국민적 사업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한다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이 반드시 실현되는 현명한 정부 측의 결론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암동 주경기장의 건립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될 월드컵 대회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러한 정부라면 분명히 IMF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절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치 않았으나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환 다음은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의원 국민회의 서울 송파 출신의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이 없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로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저 파고다공원이나 용산, 혹은 복지관 앞에서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가난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가지고 자살을 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새우잠을 자는 그러한 실직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수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경로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예산도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라면 한 끼 값밖에 안 되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예산을, 연금을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명색이…… 우리는 복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GDP의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IMF 위기를 맞아 가지고 실직자들의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160만 실직자의 가족,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들 실직자들의 자살 행렬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실직자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이들의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모래알처럼 파탄화되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규범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아노미현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조 500년에 노론, 소론 4색 당파싸움과 꼭 닮은 여야의 파벌싸움이 우리 한국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만여 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개의 법인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초당적,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을 해주기를 간절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국회상을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욕설이 없고 샷대질이 없고

몸싸움이 없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원내총무들이 기도하는 겸허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의장실을 걸어 잠그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협이 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써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설과 몸싸움을 한 국회의원은 1년 동안 세비를 몽땅 몰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이제 우리 국회에도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3당 총무가 협상이 안 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파행과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금세기 말까지 여야가 정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한** 5분 발언을 준비하시는 의원은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이양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정권의 실패한 국가운영으로 인하여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500만 원씩 외국으로부터 빚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150만이 넘는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IMF하의 합의사항인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과 여론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정치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을 고발하고 총리를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까지 고발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책임 있는 국회상과 정치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500만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터에 정치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200억 불이 모자라서 경제위기로 접어든 것이 바로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지금 비록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란의 위기에서 촉발된 경제문제가 사회적·도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10년, 20년 후퇴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를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일정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회는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고 150만 실업자 대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시라도 헛되지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나라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정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가 나라의 위기를 힘 있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회운영의 큰 틀에 대한 국회의 성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그 소임을 다할 때 경제안정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적 총화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야가 대타협의 장을 열어 나갑시다. 대타협 속에 21세기를 힘차게 개척해 나갑시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가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진 의원**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지역구를 전국에 걸쳐 두고

있는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그 최고의 규범인 헌법질서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유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진행된 후보 연합공천과 국무총리서리 임명이 헌법위반의 대표적인 예이며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헌법 파괴의 무대에 선 주연배우는 새정치국민회의이며 조연은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망을 보아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단역은 국민신당의 몫입니다. 연합공천은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산당이나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1당 독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수의 정당으로 위장하고 속으로는 하나의 당으로 내통하는 소위 연합공천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도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의제2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헌법 이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여당은 마치 집권 1년 동안은 야당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만일 국회의 다수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국민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를 가져올 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그 선거구에서 추천정당을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후보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정당을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후보의 특정정당 대표성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이중당적자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공천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에 있어서 각자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임창렬 후보를 내세우는 대신 자민련이 그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란 인천의 최기선 시장을 한나라당에서 탈당시킨 뒤 그 당적을 처음에는 국민회의로 하려다가 자민련 후보로 내보내기로 합의한 소위 연합공천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당의 공천행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당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후보자 공천이 지구당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합공천은 정당 간 야합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의 면에서도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당원과 정당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의하면 정당은 자기 당의 당원을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당원은 자기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어느 정당 후보로 추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정당의 당적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규정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헌법을 멸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연합공천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9시1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우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김종위 의원 외 157인과 3월 27일 김복동·김충조 의원 외 119인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섯 건의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선법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제1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5건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개정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 특별소위원회는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1998년 3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차에 걸쳐서 진지한 심사활동을 한 결과 연합공천 문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 배제 및 2002년까지 한시적인 임명제 전환 등 핵심 쟁점사항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당 자치위원회는 오늘 제19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동 특별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보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 정수 축소조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사람을 선출하되 광역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비례대표의원을 포함 17인으로 하고 기초의원들은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000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하였고 기초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7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급 선거사무원 수를 현행 읍·면·동 수의 6배수 이내에서 3배수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급 선거사무원 수

를 축소하고 소형 인쇄물을 축소조정하여 각종 선거에서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책자형 소형 인쇄물 1종으로 하며 시·도지사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등의 연설회는 구·시·군마다 3회 이내를 1회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의 주례행위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경조품의 제공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연설 횟수를 시·도지사 선거는 TV·라디오별 각 1회에서 각 5회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TV·라디오별 각 1회에서 각 2회 이내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언론별 초청대담 및 보도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선거운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한 개시일 전 30일부터 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 보고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발행 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는 당해 단체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 중 당해 지역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6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60일로 조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옮겨지거나 공직을 사퇴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사퇴해서 대통령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표로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제25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대한 형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4항에 의하면 지금 법사위원회가 조정안 안에 의하면 제117조의2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 그 조의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 원 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수정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256조제4항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을 베푸는 감이 없지 않아서 기왕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 법은 그대로 살려 두고 다만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 50만 원 내의 벌금에 처한다고 항을 바꾸어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3당 총무 간에 의해서 별도 수정동의가 되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박종우 의원, 지금 박종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온 안의 내용하고 다릅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의장 김수한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우 다 합의가 끝났어요.

(○김중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의장 김수한 김중위 의원!

개별적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방대한 내용

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 주세요. 합의된 내용이 나와야지 각인각색으로 전부 수정안을 내면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상정된 법률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이 반대토론이 있는 동안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정된 선거법에 관해서 이것이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나라 정당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의지가 이 정부·여당에게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야당파괴에만 골몰하고 진정한 민주발전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숫자 그리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또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또 행정구역의 개편문제, 그리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선거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은 결국 당리당략으로 처리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결국 미결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당에서 왜 지금까지 두 달간이나 여당에게 줄기차게 이런 것을 좀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적어도 4년간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유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법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만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해 가지고 선출하고 나면 행정구역개편은 불가능해집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행정구역개편에 동의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움직여서 절대로 동의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망하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고비용 구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한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해도 절대로 지방자치체도의 퇴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IMF시대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수천억 원의 돈이 지금 낭비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당분간 4년간이라도 중단하고 행정구역개편에 앞장서서 또 이것을 논의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 낭비행정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금년 가을쯤 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만이라도 4년간 선거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적어도 정당공천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당공천을 하다가 보니까 각 지역이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지역 중에서도 어느 도 출신 또 어느 도 출신 서로 원수같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완전히 중앙정치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사람들에게 맡겨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방자치는 장악되고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움직이니 어떻게 지방자치의 독립이 유지되며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앙정치, 중앙당에 의해서 훼손되는 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 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열망입니다.

여론조사에 보십시오. 기초단체장 선거 하지 말자, 4년간 임명제로 하자가 여론조사에서 78%로 나옵니다. 정당공천 배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까?

정당공천은, 우리가 사실은 정당공천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지

방자치의 독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갈등이 계속 악화됩니다. 중앙당이 지역정당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역갈등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 4년간 유보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여 주지 않고 정당공천 배제도 받아 주지 않으니까 도리 없이 우리가 주장한 것이 연합공천 배제입니다.

그러면 공천 꼭 하고 싶다면 연합공천이라도 배제하자, 이 연합공천이라는 것은 완전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제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당에서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형성하고 거기서 자기 후보를 내어서 당선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정당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남의 당 후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당의 기본을 바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당 후보를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당 후보를 위해서 운동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말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의 기본이념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을 한번 봅시다. 자, 만일 자민련, 국민회의 연합공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투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물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고 투표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정당의 이념이 정말 우리와 맞기 때문에 투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이념이고 인물이고 이런 것 전부 떠나서 지역감정으로 가 버립니다. 호남 사람, 충청도 사람 합쳐서 그냥 우리 연합공천 후보 만들어 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입니까?

정당을 보거나 정당의 이념에 좇아서 하거나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지 지역을 가지고 투표하는 이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연합공천 이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정당연합이 아니고 지금은 지역연합 내지 사람연합으로 가는 이런 망국적인 연합공천 이것은 정당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만 악화시키고 정당정책의 기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다 분열시켜 놓고 수도권에서조차 사람들을 다 분열시켜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부분 정말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선거법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두 번째, 대통령제하에서는 연합공천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당의 이념을 실현합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합공천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승흠 의원 의석에서 — 불란서에서 해요.)

불란서의 경우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지금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연합된 이원집정부제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두 군데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와 그리고 일본에서 가끔 연합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공천은 이념의 공천입니다. 정책의 공천입니다. 정책의 연합이고 이념의 연합에 의한 공천입니다. 누가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지역과 지역끼리의 연합, 지역사람과 지역사람끼리의 연합에 의한 공천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길승흠 의원 의석에서 — 독일에서 하고 있어!)

독일에서 저쪽 사람, 저쪽 사람 연합해 가지고 공천합니까? 사람끼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공천의 폐해가 어떻습니까? 각료 나누지요, 정부요직 산하기관 나누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를 써야 되는데 그 인재를 쓰지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전문인을 그 자리에 임명해 가지고 정말 좋은 행정을 펴고 좋은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합공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꽂아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각료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공천은 선거법 자체에 위반됩니다. 위헌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지금 한 당이 후보를 포기하고 다른 당 후보한테 공천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선거법상의 이해유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 당의 선거종사원은 다른 당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연합공천은 어느 모로 보나 선거법 자체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언론에서 사설로써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여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일보 사설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기일보 98년 4월 13일자 사설을 보면 두 당의 관계, 말하자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관계와 야바위 공천’ 이렇게 사설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임창렬 씨하고 최기선 씨의 경우 당적조차 이리저리 마음대로 바꾸어 가지고 당명을 바꿔치기하는 수법,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정책의 기본을 파괴하는 위헌적 야바위 공천이고 야바위 정치다’ 하고 여기 이 사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 당이 후보를 거래로 인해 내지 않게 하는 경우 선거법상의 이해유도 및 매수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여론과 언론과 이런 모든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연합공천은 저는 고발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지방선거는 고발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발해!」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연합공천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후보를 내지 않는 지구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등록을 말소해 버립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당의 후보를 내서 그것을 당선시키는 것이 정당의 기본 존립 목표인데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을 무엇 때문에 돕니까? 그래서 그 지구당 말소해 버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지구당은 말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왜 줍니까? 국고보조금은 정당활동을 하라는 것이고 정당활동의 기본은 후보를 내서 선거에 참여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당활동입니다.

그런 정당활동도 하지 않는, 후보도 내지 않는 그런 정당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까지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연합공천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여당을 설득해 왔는데 그러나 여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이렇게 이 당, 저 당 연합공천하지 마시고 합당하세요. 이념이 같고 그러면 합당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왜 합당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좀 옳은 얘기하면 들을 줄도 아세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87조를 보면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주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노동조합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번에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내 소란)

○의장 김수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제 117조의 2와 관련부분 중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시 정정을 해서 그 정정된 유인물을 지금 여러 의원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의원, 지금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표결을 원합니까?

표결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의견만 말씀했던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9시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양희 국회운영위원회 이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며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합리적으로 개

정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 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내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998년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의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실업대책과 그동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가 추진하여 왔던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각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 지금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조금 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나중에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드리기 곤란합니다.

4.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단축의 건(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9시4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3일간 단축하여 4월 8일부터 4월 24일 오늘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19시5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승홍 의원, 정의화 의원, 오양순 의원, 김홍신 의원, 류선호 의원, 김상우 의원, 강종희 의원, 조영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9시52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2명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6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투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2매 중 151표를 얻은 하순봉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봉 의원**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밤늦게 지금 식사까지 걸러 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투표해 주시고 또 투표결과를 보고 또 제 인사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점 정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구하는 지혜는 차선을 선택하는, 꼭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구하는, 차선이 안 되면 3선이라도 구해서 이른바 대화와 타협과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가 국정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철저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국회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성심껏 수행할 것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6월 4일의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인내와 대화를 통해서 광역의회의원 29%, 기초의회의원 24%를 감축하고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연설회를 축소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와 또 지방의회 운영의 구조조정과 지금까지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다소나마 개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게 된 점은 미흡하나마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간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과 더불어 보다 과감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와 앞으로 선임될 특위 위원들께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우리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회운영위원장(하순봉) 인사**

(20시06분)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

(참 조)

상임위원장 투표결과

위원회	투 표 결 과	
국회운영	하순봉 151표	안상수 1표
	한화갑 2표	기권 1표
	무효 7표	

○출석 의원 수(207)

○출석 정부위원

행정자치부 차관 석 영 철

【보고사항】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강종희	전국구	자유민주연합	1998. 4. 10
조익현	전국구	한나라당	1998. 4. 16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흥구	전국구	한나라당	1998. 4. 14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명

정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김도연

4월 7일부터 위원장 선출 시까지

(4월 7일자)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농림 해양수산	강종희	자유민주연합	1998. 4. 14
	조익현	한나라당	1998. 4. 17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	김일주	자유민주연합	1998. 3. 20
	김한길	새정치국민회의	1998. 4. 2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오장섭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한나라당	1998. 4. 15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영준	행정자치	보건복지	한나라당	1998. 4. 20
정의화	보건복지	행정자치	"	
박상천	행정자치	재정경제	새정치	
정세균	재정경제	행정자치	국민회의	
정균환	행정자치	산업자원	"	
김경재	산업자원	행정자치	"	
김홍일	행정자치	건설교통	"	
조한천	정 무	행정자치	"	
한화갑	건설교통	정 무	"	
김충조	행정자치	환경노동	"	
방용석	환경노동	행정자치	"	
김용환	행정자치	재정경제	자유민주	
어준선	재정경제	행정자치	연합	
김고성	행정자치	재정경제	"	
김범명	재정경제	행정자치	"	
김범명	행정자치	재정경제	"	
김고성	재정경제	행정자치	"	
정의화	행정자치	보건복지	한나라당	1998. 4. 21
김영준	보건복지	행정자치	"	
박희태	행정자치	보건복지	한나라당	1998. 4. 23
정의화	보건복지	행정자치	"	
김용환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자유민주	
어준선	행정자치	재정경제	연합	
강종희	농림해양수산	행정자치	"	
김종학	산업자원	행정자치	"	
조영재	행정자치	산업자원	"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호일	하순봉	한나라당	1998. 4. 24
"	권철현	이규택	"	
"	김문수	최연희	"	
"	김재천	안상수	"	
"	이재오	황규선	"	
"	김찬진	정의화	"	
"	김충일	이경제	"	
정 보	이상득	하순봉	"	

○특별위원 사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2002년월드컵등국제 경기대회지원특별	박세직	자유민주연합	1998. 4. 17

○특별위원 보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2002년월드컵등국제 경기대회지원특별	이재명	한나라당	1998. 4. 17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특별	전용원	박근혜	한나라당	1998.
"	이사철	김정숙	"	4. 20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구대표의원	신대표의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상득	하순봉	한나라당	1998. 4. 20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종희	자유민주연합	1998. 4. 10
오장섭	자유민주연합	1998. 4. 16
조익현	한나라당	1998. 4. 16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흥구	한나라당	1998. 4. 14
오장섭	한나라당	1998. 4. 15

○의안 제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월 9일 김병태·조한천·변용전 의원 외 22인 발의)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4월 9일 김병태·조한천·변용전 의원 외 23인 발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4월 9일 김병태·조한천·변용전 의원 외 21인 발의)

이상 3건 4월 1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4월 9일 김병태·조한천·변용전 의원 외 23인 발의)

4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4월 10일 이진개 의원 외 40인 발의)

4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

(4월 15일 박광태·김중학·한화갑·구천서·김원길·이태섭·손세일·김영배·박상규·김경재·조순승·김철환·김홍일 의원 외 111인 발의)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4월 18일 정부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4월 24일 어준선 의원 외 22인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4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이상 2건 4월 24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국회운영위원장(이상득) 사임의 건**

(4월 24일 이상득 의원 제출)

**제191회국회(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4월 24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8일~4월 24일 (17일간)

○청원 제출

**육군보병학교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8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191-1 김규현 외 21,332인으로부터 김인곤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제출)

4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에 관한 청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1998년 4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김중배로부터 류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4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중배로부터 이성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삼청교육 및 정화추진협의회 의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5일 경북 상주시 남성동 12번지 강효일로부터 김병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영광원전 진입도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5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덕리 548번지 이장석 외 1835인으로부터 김인곤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4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무주구천동 양민학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15일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7-4 조승윤 외 86인으로부터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철회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22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 45번지 국립목포결핵병원민간위탁반대환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배상훈 외 31,230인으로부터 이 성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잠실올림픽공원 내 경륜행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청원**

(1998년 4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4동 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영길 외 124인으로부터 홍준표 의원 외 20인의 소개로 제출)

4월 2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PCS감사 및 '97년도 공기업 감사에 관한 질문서**

(4월 8일 김영환 의원 제출)

4월 8일 정부에 이송

**경부고속철도 감사에 관한 질문서**

(4월 9일 국창근 의원 제출)

4월 10일 정부에 이송

**의사국가고시에 관한 질문서**

(4월 13일 김경재 의원 제출)

4월 14일 정부에 이송

**철도청의 전동차구매 입찰담합에 관한 질문서**

(4월 14일 국창근 의원 제출)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정과제 책자에 관한 질문서**

(4월 14일 조순형 의원 제출)

**화상국무회의시스템에 관한 질문서**

(4월 14일 김영환 의원 제출)

**감사원의 외환위기 관련 감사에 관한 질문서**

(4월 14일 이재선 의원 제출)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관한 질문서**

(4월 14일 이규택 의원 제출)

이상 5건 4월 15일 정부에 이송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질문서**

(4월 15일 방용석 의원 제출)

4월 16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은행 및 종합금융사 등의 부실채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4월 6일 정부 제출)

**규제완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4월 7일 정부 제출)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4월 9일 정부 제출)

**실업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실업 관련 교도소 입소자·범죄유형·결식학생  
현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고용증진대책사업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4월 13일 정부 제출)

**공군 제5718부대 유채봉 구타사건에 관한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월 20일 정부 제출)

**의사국가고시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월 21일 정부 제출)

(이상 9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통지**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에 대한 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4월 10일 강종희 의원, 4월  
16일 조익현 의원이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